

조희대 대법원장 ‘일방통보 제청’ 반발 잇따라

관례 갠 대법관 임명 제청 둘러싸고 민주 전북 의원 2명, 강력비판

안호영 의원 “위법 아니면 모든 것이 관찮나?... 개탄 금할수 없어”

이성윤 의원 “국민의 법원개혁 요구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절차와 사법부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방식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관찮습니까?”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논란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거나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면을 통해 최종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건너뛰었고, 그마저도 대면 협의가 아닌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듯 임명 제청을 강행했다”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 아니라 국민이 평화로운 빛의 혁명으로 되찾은 국민주권정부의 시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독단은 결국 사법개혁의 불길들 스스로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출근길에 기자

들로부터 서면 제청 이유와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성윤 의원(전주·음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한 수위의 비판을 내놔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공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오다가 별도의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데 대해 “국민의 법원개혁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고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대법

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 사건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는 특검법상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국 판결 선고 법정기한을 어긴 것”이라며 “내란 피고인들이 출가차에 요구해 온 시간 끌기 재판 지연작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일을 다시 거론하며 ‘사법쿠데타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해 5월 1일 조 대법원장이 저지른 이재명에 대한 사법쿠데타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법을 무시하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결탁해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 까 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

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뮬이라고 해도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면서도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관계를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간 관례적 협의의 범위,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가 어느 정도의 정치·헌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오만호 기자

“이젠 속도와 실행”

새만금 메가 특구 등

민관합동추진 2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메가 특구 및 RE100 산업단지 성공자정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4일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및 RE100 산업단지 지정 신청 관련 진척 상황 및 대응전략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구축 방안 △로봇클러스터 구축 방안 △공공 R&D, 부품·국산화 지원, 입주업체 취업지원금, 세제 인센티브 등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신청 관련 진척 상황 및 대응전략 △RE100 산업단지 지정 신청 관련 진척 상황 및 대응전략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구축 방안 △로봇클러스터 구축 방안 △공공 R&D, 부품·국산화 지원, 입주업체 취업지원금, 세제 인센티브 등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간 간 이견 조율을 비롯한 총괄 조정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주재하는 IT에서 주도하고, 메가특구 지정 신청 등 세부 실무협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실무 차원의 신속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김의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메가특구와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현대자동차그룹이 한몸처럼 움직이겠다”,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정착하는 새만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AI 정책 아이디어

전북 도정 반영 추진

도민과 공무원이 낸 인공지능(AI) 활용 정책 아이디어 17건이 도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 ‘2026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본선사’에서 도민 부문 10건, 공무원 부문 7건 등 모두 17건을 우수 제안으로 뽑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모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올해는 △로봇클러스터 △산업경제 △도민안전 등 AI를 접목한 분야별 대전환을 주제로 삼았으며,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접수에 314건의 아이디어가 몰렸다.

도민 부문 대상은 ‘마감 임박 로컬푸드, AI가 전북 도민 식탁에 생명을 불어 넣다’가 차지했다. 매장별 재고·판매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마감할 품목을 자동으로 골라내고, 인근 도민에게 실시간 맞춤형 할인 정보를 알린 뒤 지역화폐 결제와 기부까지 연결하는 상생형 소비 촉진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공무원 부문 대상은 ‘AI 기반 지능형 우분(소통) 수거·물류 최적화 및 고체 연료화에 몰입했다. 수거 경로를 AI로 최적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을 활용한 고체연료화 체계를 갖춰 탄소중립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잡자는 내용이다.

우수 제안자 17명에는 도지사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도민 부문은 대상 1명 18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50만원, 우수상 3명 각 100만원, 장려상 4명 각 30만원이다. 공무원 부문은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80만원, 우수상 3명 각 40만원을 받는다.

도는 선정된 17건을 관련 부서 검토와 보완, 구체화 과정을 거쳐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립의전원 남원 단일캠퍼스 원안 이행해야”

민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전북 남원 단일 캠퍼스 원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지역 캠퍼스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장관이 특정 서울 부지를 언급한 것은 자율적인 논의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자원과 권한은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는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약속한 전북 남원 설립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 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것과 서울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남원 단일 캠퍼스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 필수 의료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임상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을지연습 실제훈련자 격려 나선 이원택 도지사

19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통합방위위원들이 드론테러 발생에 따른 신고·대피, 현장 대응 등 실제훈련을 참관하고 훈련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교육·학교 밖 예산 격차 91배

강경수 의원 등 주최 국회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 열려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 해소 위한 배움의 기록권 보장해야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과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장에서 강경수·유혜인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습 인정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병근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결집이나 이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 경로와 배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움의 기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성경 전 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학습 목표와 과정, 성찰 등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서 이를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 격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공교육 학생 1인당 예산이 1,754만원인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19만원에 불과해 약 91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법령의 의무 규정 강화 등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꿈이음 사업과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학력과 경력으로 연계하고, e-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도 토론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학교 이탈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만호 기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가속도’

금융위, 평가방안 심의

향후 지정 절차 본격화

추가 회의 거쳐 결정

전북의 이른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차관과 서울특별시시장·부산광역시시장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

험협회 등 유관기관장, 대학·연구기관·금융기관 전문가 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공식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지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거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향후 금융기관 이전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이전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분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방안 심의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구체적인 평가와 결정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에서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과 발전 가능성, 금융기관 집적 및 이전 여건 등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이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기관 집적,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오만호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활동 개시

군산시의회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신애, 이하 인사특위)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신애 위원, 부위원장에 정도원 위원을 각각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인사특위는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경애, 이영미, 김효주, 이동현이희숙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활동계획과 후보자와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인

사청문 준비에 착수했다.

인사특위는 오는 9월 8일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청취하고, 군산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구상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